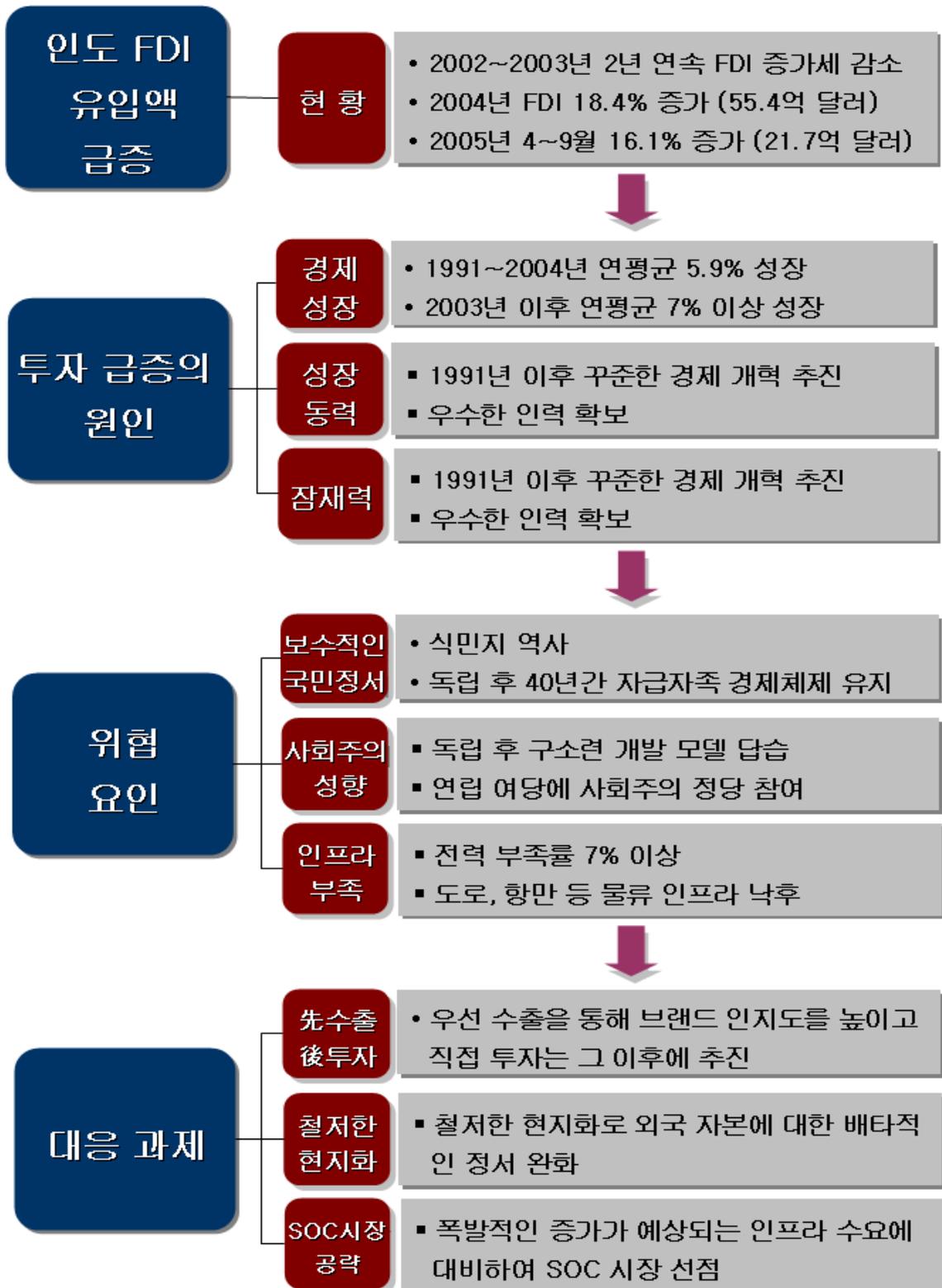


□ 인도,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1. 급증하는 대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FDI)

- (FDI 추이) 2005년 들어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가 급증하고 있음
 - 1991년 경제 개혁 이후 FDI 유입액이 1990~91년 9,700만 달러에서 1997~98년 35.6억 달러까지 증가¹⁾
 - 1998년 인도가 핵실험을 강행하자²⁾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이 인도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1999~2000년 FDI 유입액은 21.6억 달러까지 감소
 - 인도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인정책을 다시 강화하면서 FDI 유입액은 2001~2002 회계 연도에 61.3억 달러까지 증가

< BJP 연립여당의 주요 외국인 투자유인책 >

	내용
세금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45%에서 40%로 인하하여 인도기업의 법인세율인 35%에 근접 · 인도 내 완제품을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최고 수입관세를 35%에서 30% 인하 · 2004년 회계 연도 까지 완제품 20%, 원자재·중간재·부품은 10%로 수입관세를 단순화 · 외국 기업들은 기존 배당금의 10%가 아닌 실수령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
감가상각률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 및 기계류에 대한 15%의 추가 감가상각 허용
투자지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기관투자자(FIEs :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를 외국인투자지분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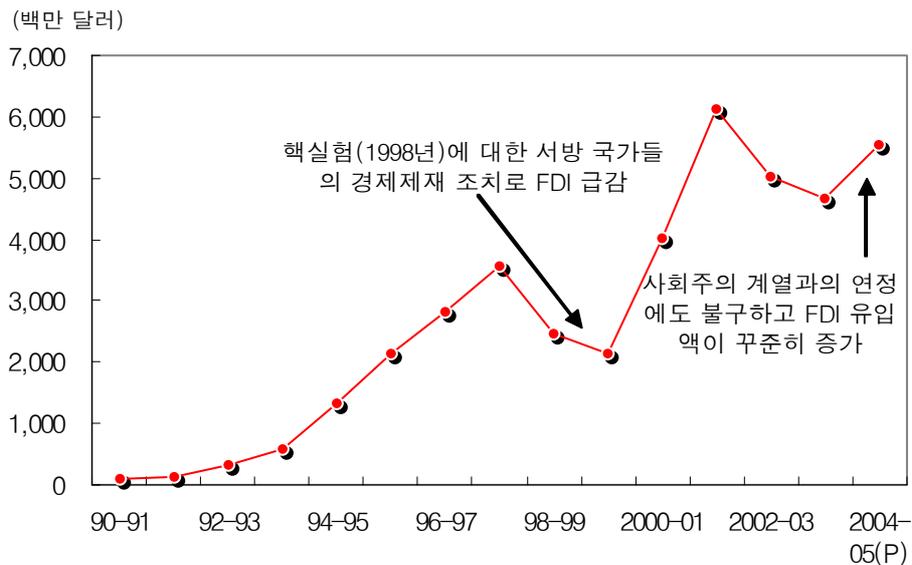
자료 : 수출입은행.

1) 인도의 회계 연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 까지임.

2) 당시 인도의 연립여당 BJP(Bharatiya Janata Party)는 주변국들의 핵군비 증강을 견제하기 위해 핵실험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인도인의 대외자긍심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립정부의 불안정한 지지기반 및 취약한 결속력을 강화 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상 수출입은행, 「인도, BJP 연립정부의 붕괴와 향후 전망」, 『수은 해외경제』 1999.5.

- 2004년 4월 총선에서 공산주의 계열을 포함한 신집권연합(UPA : United Progressive Alliance)이 집권했음에도 2004~2005 회계 연도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18.4% 증가한 55.4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2005~2006 회계 연도에도 4~9월 까지 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한 21.7억 달러 기록 중

< 인도 FDI 유입액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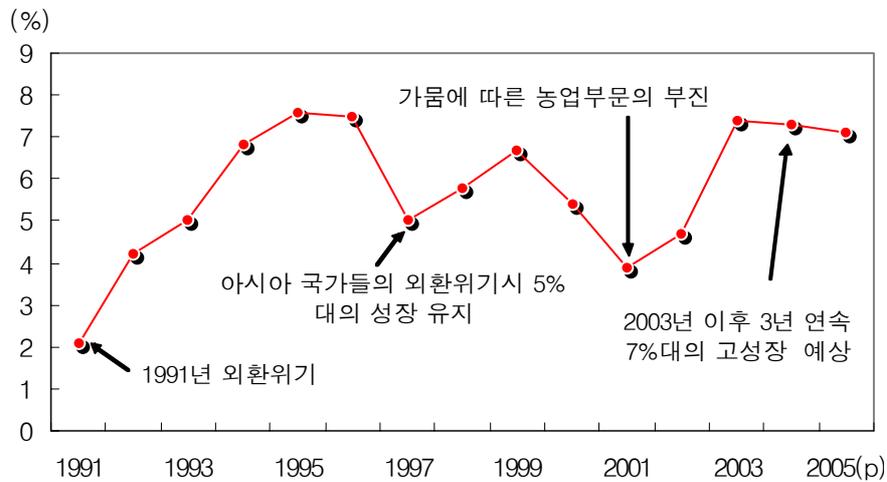


자료 : Reserve Bank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주 : 2004~2005년 회계 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

2. FDI 왜 증가하나?

- (눈부신 경제성장) 과거 10년간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1991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성장률이 2.1%에 그쳤으나 그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5.9%씩 성장
 - 특히 2003년부터는 연평균 성장률이 7%를 넘어섰으며, 2005년 4~9월간에는 8%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 중임

< 인도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 주 : 1) 실질 경제성장률
- 2) 2005년은 IMF 예상치.

○ (성장 동력) 1991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경제 개혁과 우수인력이 인도 고성장의 배경임

- 경제 개혁 : 1991년부터 나라심하 라오(P.V. Narasimha Rao) 인도 총리는 인도 독립 이후 50년간 지속되었던 자급자족적·폐쇄적 경제체제를 개혁
 - 산업규제 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제거, 외국인 자본유치를 위한 개혁조치, 개방지향적 무역 및 외환정책 도입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
 - 그 결과 1991~1998년 까지 GDP는 약 3배, 1인당 GDP는 약 2.5배 증가
- 우수 인력 : 매년 5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세계 공과대학 순위 3위³⁾인 인도 공과대학(IIT :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은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IT 산업의 핵심 두뇌로 인정받고 있음
 - 2004년 인도의 IT 서비스 수출액은 총 173억 달러⁴⁾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총 수출액의 30배 규모이며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수준임
 - 마이크로소프트(MS)는 4년간 17억 달러(1조 7,500억 원)을 인도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외에 시스코(Cisco) 11억 달러, 인텔(Intel) 10억 달러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인도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수립

3) 영국 The Times, 2005. 10, 매일경제신문 재인용.

4) 인도소프트웨어기업협회(NASSCOM).

○ (잠재력) 두터운 청장년층을 바탕으로 일본이나 한국이 고성장기에 누렸던 '인구의 선물(Demographic Gift)' 단계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며 몇 년간 지속된 경제성장으로 구매력이 높아져 시장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음

- 미래지향적 연령구성 : 18~3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5세 미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60%에 달해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피부양인구의 부담은 줄어들면서 인구 구성상 경제 발전에 유리한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 인구의 선물 (Demographic Gift)

- 인구의 선물이란 용어는 하버드 대학교의 블룸 교수와 윌리엄슨 교수의 논문,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에서 소개되면서 인구경제학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음.
- 이 논문에서는 국가의 인구구성 변화(Demographic Transition)를 세 단계로 나누었음
 - 부담단계(Burden Phase) : 사망률이 급감하고 출생률은 급증하면서 15세 미만의 피부양 인구가 늘어나 노동인구의 부담이 증가하는 단계
 - 선물단계(Gift Phase) :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인구로 대거 편입되면서 부양 부담이 감소하는 한편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단계
 - 고령화 단계 : 기존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부양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의 선물이 소멸되는 단계 (블룸과 윌리엄슨은 논문에서 이 단계를 고령화 단계라고 명시하지 않았음)
- 이 논문에서 이러한 인구구성의 변화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동아시아는 2010년에 피부양 인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소비시장 활성화 : 신흥 부유층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중산층까지 구매력이 커지고 있어 유통시스템과 외국 자본의 투자가 활성화 된다면 인도의 소비시장은 크게 팽창할 가능성이 있음

- AT Kearney에 따르면 3억 명으로 추정되는 인도 중산층 소비자 계층의 출현으로 인도의 소매시장규모는 2004년 3,300억 달러에서 2010년 6,07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예컨대 소득수준 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도 자동차 시장규모도 2003년 65만 대에서 2005년 92만 대로 5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3. 걸림들은 없는가?

- (보수적인 국민정서) 인도의 국민 정서는 외국 자본에 대해 다소 보수적이고 폐쇄적임
 -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1991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인도는 대내 지향적인 자립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였음
 - 이러한 정서는 식민지 기간 동안의 진행되었던 서구 열강들의 수탈, 독립 이후 마하트마 간디가 주장한 마을단위의 자급자족 경제체제 등에서 비롯됨
- (뿌리깊은 사회주의 경제모델) 독립 후 인도의 경제개발 계획은 구소련 모델을 상당부분 답습한 것이었으며, 현 연립여당에 공산주의 계열이 포함되어 있어 서구식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있음
 - 40년간 지속된 인도 경제개발계획의 근간였던 마할라노비 모델(The Mahalanobis Model)은 구 소련 경제체제의 많은 부분을 답습
 - 2004년 4월 인도 총선에서 8년간 경제 개방을 이끌었던 민족민주연합(NDA)이 패하고 사회주의 계열을 포함한 20여개 정당으로 이루어진 신집권연합(UPA : United Progressive Alliance)이라는 연립 여당이 등장
 - 현재 인도의 연립여당은 145석의 국민회의당과 62석의 공산당이 주축이 되어 있음
 - 연립여당은 인도 경제개방의 설계자로 알려진 만모한 싱(Manmohan Singh)을 총리로 추대하고 FDI 확대 의지를 꾸준히 표명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계열의 견제가 심해 뚜렷한 투자유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⁵⁾

5) 2005~200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국영기업 매각으로 인해 충당할 수입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음. 이상 수출입은행, 「국영기업 민영화 차질 빚어져」, 『수은해외경제』, 2005.10.

< 경제 개방에 대한 공산주의 계열의 잇단 제동 >

	내용
투자지분 제한	· 2004년 7월 인도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은행은 타 은행에 대한 주분투자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은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
공기업 민영화 제동	· 연립여당 초기 수립된 공동경제계획(CMP)에서 민영화 되는 공기업은 적자기업에 국한한다는 내용에 따라 흑자를 기록한 13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전면 철회
고용 제한	·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외국기업들은 문을 닫을 경우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허가는 물론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개정 반대

자료 : 수출입은행. Financial Times, 2005. 11. 30. *The power of productivity*, 2004.

○ (인프라 부족) 인도의 인프라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⁶⁾

- 전력 : 고질적인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력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제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003~2004 회계 연도 인도의 전력 부족률⁷⁾이 평균 7.1%이며 전력 사용 피크시에는 11.2%까지 올라가는 등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 1인당 소비량이 582kwh⁸⁾로 우리나라의 6,502kwh⁹⁾의 1/9 수준이며 최근 소득 수준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어 향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큼
 - 2004년 WEF(World Economic Forum) 발표에 따르면 잦은 정전과 전압의 불안정성 등으로 전력의 질이 104개 비교대상국 중 87위에 그쳤음
 - 2012년까지 10만 KW 전력 증산을 골자로 하는 플랜 X와 플랜 XI를 추진 중이나 인도의 1년 예산과 맞먹는 1,200~1,6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GDP 대비 4%대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인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큼

6) 인도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104개 국가 중 63위 수준임, 이상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4-2005*, 2004.

7) 전력 부족률 = (전력 수요량-전력 공급량)/전력수요량

8) 2004년 3월 31일 기준, 이상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9) 2004년 총 전력사용량(산자부)을 추계인구(통계청)로 나누어 계산.

- IT : IT 서비스 부문 수출액은 인도 전체 수출액의 1/5 규모인 173억 달러로 세계 2위이지만 하드웨어 및 관련 기반시설은 열악함
 - IMD에 따르면 통신 기술 지수는 60개 비교대상 국가 중 37위로 중국(54위)보다는 높지만 한국(16위)를 비롯한 선진 국가에 비해서는 낮아 IT 기술이 첨단 정보통신을 요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수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기타 컴퓨터 보급률(12명/1,000명), 인터넷 사용자(34.7명/1,000명), 광대역 통신망 사용자(0.13명/1,000명)으로 60개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IT관련 하드웨어도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음

< 인도·중국·한국의 주요 IT 보급률 현황 >

	인도	중국	한국
통신 기술 지수	7.43 (37위)	6.21 (54위)	8.65 (16위)
컴퓨터 보급률	12 (59위)	41 (55위)	539 (21위)
인터넷 사용자	34.7 (59위)	78.5 (56위)	649.7 (6위)
광대역 통신망 사용자	0.13 (55위)	8.14 (37위)	233.2 (1위)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 주 : 1) 통신기술 지수(2005년 기준)는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키면 10, 그 반대면 0임
- 2) 컴퓨터 보급률(2004년 기준), 인터넷 사용자(2004년 기준), 광대역 통신망 사용자(2003년 기준)은 인구 1,000명당 비율임.

- 물류 : 현재 4차선 이상 도로는 전체의 2~3%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고 항만비용이 높아 전반적인 물류인프라가 열악함
 - 도로의 경우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를 잇는 총 연장 5,846km의 '황금의 4각 고속도로(Golden Quadrilateral)'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 물류의 혁신이 기대되나 4차선 이상 도로가 전체의 2~3%에 불과하고 기상조건에 의해 운행이 통제되는 도로가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 인도의 항만¹⁰⁾ 비용도 인근 싱가포르항이나 콜롬보항 보다 약 50% 정도 높아 결과적으로 총 수입가격에서 해운비용의 비중이 세계 평균 5.24%의 두 배 수준인 10.3%를 차지

10) 인도 4대 항만(뭄바이, 캘커타, 나바셰바(JNPT), 첸나이항) 기준.

4. 인도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 (시사점) FDI 유입액이 2005~2006 회계 연도에도 4~9월 까지 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여당의 정치적 성향, 기존의 경제체제와 국민적 정서, 그리고 취약한 인프라를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외국인자본에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주의 계열과의 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FDI가 급증하고 있어 대 인도 투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하지만 과거 FDI 유입액은 인도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현 연립여당에 사회주의 계열 정당들이 동참하고 있어 정치권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야 함
- 구 소련식 경제 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40년 이상 지속되었던 자급자족적·폐쇄적 경제 체제를 유지하였으므로 외국 자본에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야 함
- 각종 인프라가 열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대 인도 투자를 결정해야 함

○ (대응 과제) SOC 시장, 선수출 후투자, 철저한 현지화가 필요함

- 先 수출 後 투자 : 선부른 투자 보다는 몇몇 한국산 제품이 인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편승하여 우선 한국산 제품을 인도에 수출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철저한 현지화 :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고, 독립 이후에도 약 40년 가까이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했으므로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해 배타적인 정서를 완화시켜 나가야 함
- SOC 시장 공략 : 전력, 통신 네트워크, 항만, 도로 등 부족한 인프라를 새롭게 증설해야 할 상황이지만 인도정부의 재정적자가 GDP의 4%에 달하고 있어 외국 민간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인도 SOC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함

이상우 선임연구원 (leesw@hri.co.kr, 3669-4014)